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여당, 최고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 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 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1.5% 포인트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 포인트나 올랐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 비중은 3.0%였으며, 2016년에는 3.6%였다. 기업들이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내는 세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만큼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의 규모도 커져 법인세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사에서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회공공서비스 외에도 가계나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대한 자제…조사시기, 납세자 직접 선택”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14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

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기업자들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감세 시동… 반도체 등 시설투자감면 300% 이상 확대

국민의힘이 강력한대기업 세금감면 드라이브를 건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의 배 이상의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다.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술분야 대기업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히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